

주택·토지 종부세 상한 150% 유지 주택 기금 45조, 공급에 30조 투입

세제개편안의 후퇴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목받았다. 그간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린 것.

기준 12억 원은 지난 8월 3일 이전의 수준이다. 예전처럼, 공사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9억 원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 공제 6억 1세대·공동명의 1주택 부담 완화

예산, 미래성장·생계·출산 등 중점 국토부, 9.9% 증가 69조 역대 최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고 150%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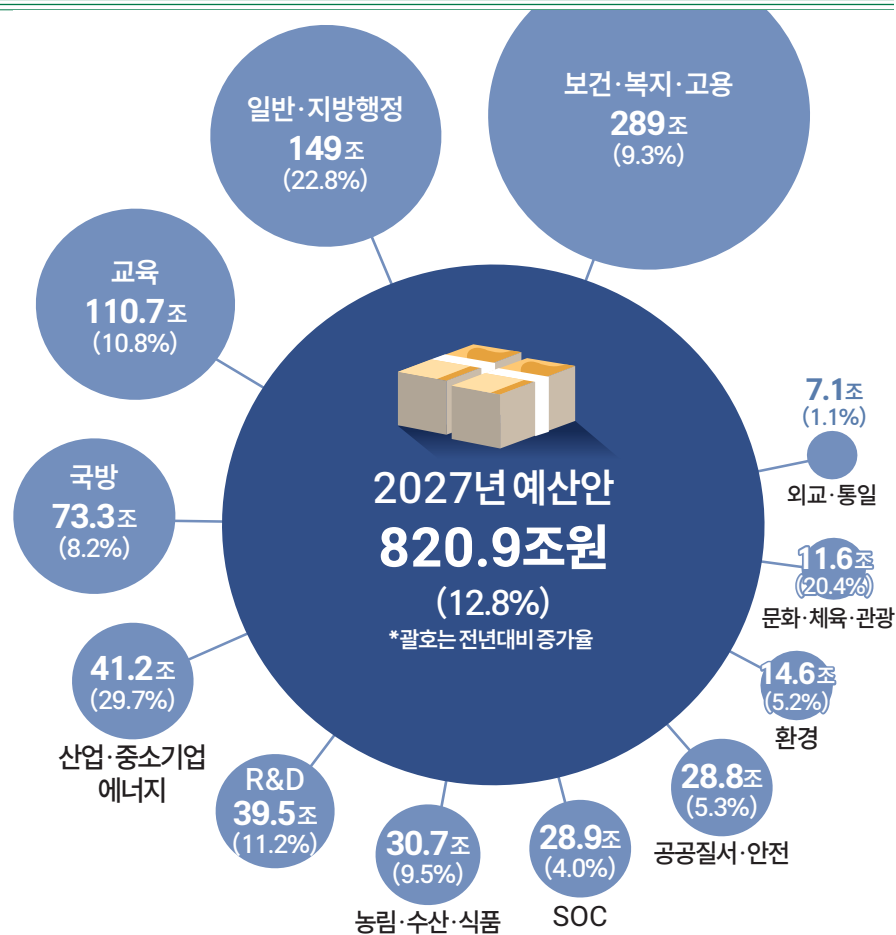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하지만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

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시기로 했다. 그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병양 등을 열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7 예산안’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뿐 아니라 국민의 현재 삶과 관련된 전략도 비중 있게 담겼다. 살 집과 생계, 출산 등에 대한 지원책이다. 특히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기본소득사업도 전국 농촌 각지로 확대해 실시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 규모로 꾸렸다. 올해 본 예산보다 9.9% 증가했다. ‘국토’ 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24조 원으로 편성된 데 반해 기금은 17.8% 증가한 4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증액분은 대부분이 주택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안정 지원에 초점이 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관련 예산이 올해 21조2000억 원에서 내년 30조 원으로 8조8000억 원 늘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하에 내년 공적주택을 올해(19만4000호)와 비교해 12% 가량 늘어난 21만8000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 등이다.

이 중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3만3000호) 신규 도입에 6조2000억 원을 쓴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층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기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 (1696억 원)과 ‘PF 앵커리츠’ (1000억 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인다.

내년으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도 18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8.2% 늘어난 148조7697억 원이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아동기부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더하면 152조4328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총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에 달한다.

내년에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째 아이에 1000만 원, 둘째에 1200만 원, 셋째 이상에는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간 4회로 나눠 지급한다.

아동기부수당은 0~12세 아동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각 10만 원이다.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0~1세 아동이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월 30만 원이 추가된다.

이는 개편안으로, 내년 7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조22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짰다. 올해 대비 10.4% 늘어난 규모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사업 예산을 올해 3047억 원에서 내년 1조1668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지역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린다. 이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처음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 20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연세·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전국 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2026 JINAN RED GINSENG FESTIVAL

진안홍삼축제

2026. 9.18.~20. 일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

축하공연 라인업

9.17 (목) 21시 전야제

홍삼빛 낙화놀이

장소:진안고원시장 천변
진안홍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행사
'홍삼빛 낙화놀이'

9.18 (금) 18시 개막공연

에일리, 데이브레이크

9.19 (토) 18시 레드에너지 페스타

국카스텐, HYNN(박혜원), 찬(Chan), 한희

주요 프로그램

함께라서 더 즐거운 공연!
캐치! 티니핑 상어통쇼 & 하추핑 포토존
홍삼가족공연(마술, 발론, 버블)

온가족 취향저격, 다채로운 체험
홍삼비비큐, 홍삼한상, 홍삼명인교실, 홍삼깍두기담그기, 홍삼 파워존, 홍삼떡볶이 나눔(with 두끼떡볶이) 마을에서 놀자, 홍삼에너지 충전

머뭇수룩 즐거운 홍삼축제!
蓼蓼한 주재관, 홍삼 키즈존, 홍삼 웰니스타임, 족욕체험 등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2026. 09.20. (일) 오후 다섯시

마이산북부 광장 (특설무대)

심수봉
 이찬원
 장민호
 김다현
 윤수현
 미스김

‘모든 청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회

>> 1면 ‘821조 슈퍼예산...’서 계속

또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을 폐지해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과 지방 재직자는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는 물론, 보다 넓은 평수(50~84㎡·15~25평)의 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도 마련했다. 지방 국립대(30개교)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점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국립대병원 시설도 확충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

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종부세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당초 개편안을 유지한다. 다만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때 기본공제 금액을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안을 완화해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과 같은 각각 9억원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서예진 기자 syj@